

# 사회복지 주간 동향(23.6.19.~6.23.)

## 1. 용인시 정책 동향

### 1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영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길거리 캠페인 전개**



- \* 영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3일 복지위기가구를 찾기 위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길거리 캠페인을 실시
  - 이번 캠페인은 최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어 위기가구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주민의 이웃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전개
  - 영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맞춤형복지팀은 2개조로 편성하여 “당신의 어려움을 알려주세요! 이웃의 위기를 전해주세요!” 문구가 새겨진 어깨띠와 피켓을 들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슈퍼, 편의점, 야구, 부동산 등 상가 시설 등을 방문하여 길거리 홍보를 통해 복지서비스 안내문과 홍보 물품을 전달하여 주변의 이웃을 발견할 경우, 영덕2동 행정복지센터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함

\* 영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건강길잡이 사업, 어버이날 영양간식 지원, 장수사진 후원 등 복지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 오현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앞으로도 우리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복지캠페인 및 복지사업을 발굴하는데 앞장 서 나가겠다”고 좋은 뜻과 의지를 밝힘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영덕2동 맞춤형복지팀)

## 2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 마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층 수학여행비 지원



- \* 용인특례시 기흥구 마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홍용식)가 저소득 초·중·고 재학생에게 수학여행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힘
  - 수학여행비 지원사업은 (주)KCC 중앙연구소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마북동에 기탁한 이웃돕기 후원금으로 마련함
  - 마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번에 가정형편이 어려워 수학여행 참여에 부담을 느끼는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 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 학생들에게 1인당 최대 초등학생은 24만원, 중학생은 28만원, 고등학생은 47만원을 지원
  -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12월 10일까지 수학여행비 지원신청서와 증빙자료를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는 “물가 상승으로 수학여행 경비 부담 증가로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추억을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화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마북동 맞춤형복지팀)

### 3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 양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력기관 인증현판 전달



- \* 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BBQ치킨 용인양지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복지협력기관 인증 현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힘
  - 'BBQ치킨 용인양지점'은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에 협력해 지난 5월부터 매일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10가구에 치킨을 지원
  - 양지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기부받은 치킨을 위원들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전달
  - 양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소영 민간위원장은 “나눔 문화가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 매장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착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업소와 힘을 모아 이웃돕기에 힘쓰겠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양지면 맞춤형복지팀)

## 4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 신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 청소년에 에버랜드 이용권



- \* 용인특례시 수지구 신봉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경순)가 저소득 가정 청소년 20명에게 에버랜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10만원권)을 지원했다고 12일 밝힘
  - 협의체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문화생활을 즐기도록 돕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이용권을 준비
  - 김 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이 꿈을 잃지 않고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소외된 계층을 위해 특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함
  - 동 관계자는 “항상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협의체 위원들께 감사하다”며 “살기 좋은 신봉동을 만들어가는데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신봉동 맞춤형복지팀)

## 5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 기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4호 희망나눔 실천가게 위촉



- \* 용인특례시 기흥구 기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한식 뷔페 ‘맛있는 녀석들’ (대표 이광순)을 희망나눔 실천가게 14호점으로 새로 위촉하고 지난 15일 희망나눔 실천가게 현판을 전달
  - 희망나눔 실천가게는 기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소득층을 위한 먹거리 후원 등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2020년부터 지정해 운영
  - 협약에 따라 맛있는 녀석들은 매주 1회 독거노인 5가구에 영양 도시락세트 제공
  - 이광순 맛있는 녀석들 대표는 “작은 마음이지만 함께 모이면 큰 행복이 될 수 있는 만큼 기흥동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함
  - 김영숙 기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나눔에 동참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기흥동 맞춤형복지팀)

## 2. 중앙정부 정책 동향

### 1 중앙정부 복지현안

#### 특수형태 고용·플랫폼 종사자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 전속성 폐지와 적용대상 직종 확대로 약 92만 5천명 노무제공자 혜택 >

- \* # 대리운전기사 ㄱ 씨는 지난해 7월 대리운전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으나 특정 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함
- # 올해 1월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ㄴ 씨 또한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 차량과의 추돌사고로 다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으나 ㄱ 씨와 같은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함
  - 이처럼 그동안은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은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음
- \* 2023년 7월 1일부터는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됨
  - 고용노동부는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으나, 2023년 7월 1일부터 이러한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되므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개정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이 확대되어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하여 모든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제도의 정착률을 위해 일부 직종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
- \* 정부는 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와 적용대상 직종 확대로 약 92만 5천 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
  - 사업주는 7월부터 발생하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
- \* 근로복지공단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확대로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사업장과 노무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직종에 대해 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영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보험 보험사무를 이행하는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할 예정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출처:고용노동부) 참조

## 2 중앙정부 복지현안

###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10만 가구 확대 제공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사업 시행 >  
<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빈틈없는 안전망 제공 >

- \*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사업이 본격 시행되어 추가 10만 가구에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밝힘
- \* 본 서비스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장비를 집안에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 및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 119로 자동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
  - 2022년 말 기준 총 20여 만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 중, 작년 한 해 조치된 응급상황 및 신고는 총 16만 3,268건이었다. ▲응급버튼을 통한 신속 신고 1만 7,950건 ▲화재로 인한 자동 신고가 6,265건 ▲활동이 감지되지 않아 낙상, 고독사 등이 의심되어 응급관리요원이 안부를 확인한 경우 13만 9,053건
  - 울산의 70대 어르신은 심근경색 시술 후 댁에서 코피가 멈추지 않자 응급버튼을 눌러 신속히 119의 도움을 받아 치료, 전북 완주군의 80대 어르신은 외출 중 자택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화재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에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 또한 전북 정읍시에서는 80대 어르신이 저혈당 쇼크로 쓰러져 활동이 감지되지 않자 응급관리요원이 보호자 확인 후 현관문을 개방하여 응급실로 이송해 생명을 구하기도 함
  - 2023년 본격 시행되는 3차 사업은 “살려줘”를 외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음성인식 기능과 활동이 감지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안부전화를 하는 인공지능 케어콜 서비스 등 발전된 기술을 추가로 도입,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 가능

※ 보도자료 참조(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

### 3 중앙정부 복지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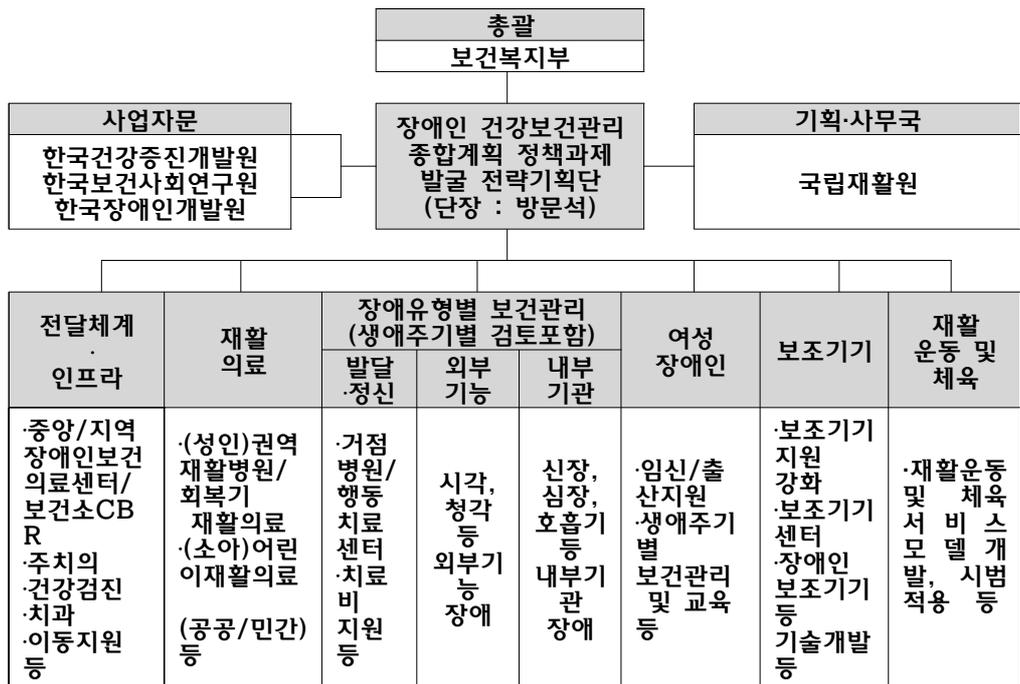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마련 위한 ‘정책과제 발굴 전략기획단’ 발족

< 정책과제발굴 전략기획단 제1차 총괄위원회 개최 >

-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마련을 위해 ‘정책과제발굴 전략기획단’(이하 기획단)을 발족하고 제1차 총괄위원회(kick-off) 개최
  - 해당 기획단은 국립교통재활병원장을 중심으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정책 분야 학계·전문가·관계단체·자문기구 등이 참여하여 정책 여건을 진단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할 예정
    -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전달체계·인프라 ▲재활의료 ▲장애유형별 보건관리 3개 분과(발달·정신, 외부기능, 내부기관) ▲여성장애인 ▲보조기기 ▲재활 운동 및 체육 총 8개 분과위원회가 11월 말까지 운영
  - 분과별 논의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장애계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공청회·관계부처 협의 등을 실시하여 종합계획을 2024년 상반기 중으로 수립할 계획

### 붙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정책과제발굴 전략기획단

\* 전략기획단 구성·운영



\* 조직별 역할

구분	주요 역할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획, 관계기관 협의, 의사결정</li> <li>- 사업계획 및 결과 보고 검토· 최종 승인</li> <li>- 종합계획 공청회 주최 및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운영</li> </ul>
전략기획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계획 수립 전략기획단 구성·운영(총괄/분과별 회의)</li> <li>-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비전 및 목표 설정 분과별 과제 조정</li> <li>-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중점, 세부 정책과제 설정(분과별)</li> <li>-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성과지표 설정(분과별)</li> </ul>
기획·사무국 (국립재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추진 전략기획단 기획 및 운영지원, 기초연구 수행</li> <li>- 분과별 사업계획 및 수행 경과, 결과 보고, 종합계획 공청회 주관</li> <li>- 추진단 사업관리 및 의사결정 지원·조정</li> <li>-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지역사회 협력체계 의견수렴 등 참여지원</li> <li>-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 지원</li> </ul>
사업자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분과별 리뷰(한국보건사회연구원)</li> <li>-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연계·반영 및 성과지표 설정 자문(한국건강증진개발원)</li> <li>- 전달체계·인프라(BF, Barrier Free 관련), 발달·정신, 외부기능 장애, 내부기관 장애, 여성장애인 등 관련 정책 자문(한국장애인개발원)</li> </ul>

※ 보도자료 참조(건강정책국 장애인건강과)

## 4 중앙정부 복지현안

### 복지분야 최초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운용사에 가이아벤처파트너스 선정

< 정부 100억 원, 민간 40억 원 출자 통해 총 140억 원 규모 펀드 조성 >

- \* 보건복지부는 올해 처음으로 조성되는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운용사로 가이아벤처파트너스가 최종 선정
  - (절차) (1차) 서류(정량)+운용사 인터뷰 → (2차) PT(정성)+출자심의회 의결
  - 출자심의위원회 7인(한국벤처투자 2, 복지부 지명 1, 외부위원 4 선정)
- \*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는 정부 출자금과 민간 출자금을 통해 조성되며, 사회서비스 분야의 혁신적인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기술개발이나 새로운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 가이아벤처파트너스는 다양한 모태펀드 운용 경험이 있어 사회서비스 분야 혁신적인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음
  - 펀드 규모는 총 140억 원으로, 정부의 모태펀드 출자금 100억 원과 운용사가 모집하는 민간 출자금 40억 원을 포함하여 총 8년(투자기간 4년 + 회수기간 4년) 동안 운영, 펀드의 투자 대상은 새롭고 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및 디지털·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고품질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업
    - 운용사로 선정된 가이아벤처파트너스는 3개월 이내에 민간 출자금 40억 원을 확보,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를 결성한 뒤 사회서비스 분야 기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할 예정

#### 붙임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개요

- \* (사업 목적) 모태펀드를 활용하여 민간 재원을 혼합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 \* (조성 규모) '23년 140억 원(정부 출자금 100억 원 + 민간 출자금 40억 원)
- \* (존속기간) 8년 (투자(납입) 4년 + 회수 4년)
- \* (투자 대상)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되, 노인·장애인·아동 등 돌봄과 관련해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약정총액의 20% 이상 투자
  - ①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사회서비스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개선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기업(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분야(보건의료·환경 제외)에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 하는 상담, 재활, 돌봄, 정보제공, 시설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말함

- ② 디지털·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효과적 이용·제공에 도움을 주는 일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기술 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기·장비를 개발 또는 상용화하는 기업

< 사회서비스 관련 기업 분야(예시) >

- ① 새로운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 ②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콘텐츠 제공
- ③ 통합(융합)서비스 제공
- ④ 사회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거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기술·장비개발
- ⑤ 사회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거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컨설팅·정보제공
- ①~⑤ 등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기업

※ 보도자료 참조(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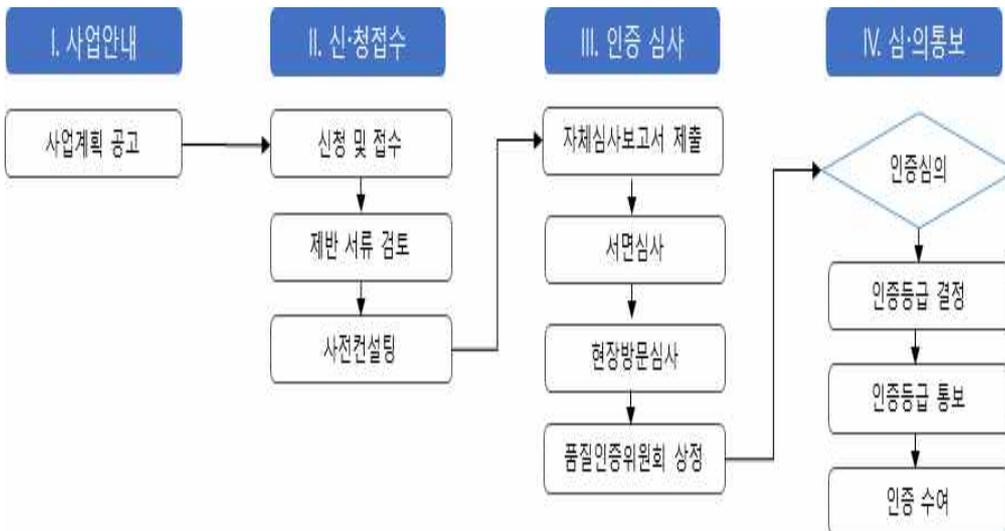
## 5 중앙정부 복지현안

### ‘인증’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 <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2차년도, 6.19(월)~7.7(금) 참여기관 공모 >
- < 우수한 품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품질인증 부여 >
- < 인증받은 제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여 이용자 선택권 강화 >
- < 올해부터 정부 바우처 미제공 민간기관도 품질인증 신청 가능 >
- < 발달재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등 4종 서비스 대상 확대 >

- \* 보건복지부는 6월 19일(월)부터 7월 7일(금)까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 사업에 참여할 제공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힘
- 2022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는 고품질 서비스 제공기관에 인증을 주는 제도로, 인증받은 기관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자발적 품질제고 노력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됨
- 기존 평가제도는 모든 제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저기준을 규정했다면, 품질인증제는 자율적으로 신청한 기관에 대해서 심사하며, 우수한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의 품질 수준을 제시
- 올해는 2차년도 시범사업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에 발달재활 서비스가 새롭게 추가, 또한 바우처 제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했던 지난해와는 다르게 정부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민간제공기관 또한 품질인증 신청이 가능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진행절차>



- 인증신청 기간은 6월 19일(월)부터 7월 7일(금)까지이며, 신청은 이메일 접수로 이루어지고 인증 수수료는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무료(접수처 : 중앙사회서비스원 담당자 이메일(ssqa@kcpass.or.kr))

< 인증 접수 및 신청방법 >

◇ 신청 기간

- 6월 19일(월) ~ 7월 7일(금) 18:00

◇ 인증신청 공고

-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www.kcpass.or.kr) ▶ 공지사항

◇ 인증신청 방법

- 접수방식 : 이메일 접수(ssqa@kcpass.or.kr)

◇ 인증 수수료

- 무료

◇ 문의처

-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품질본부 사회서비스품질평가부  
(ssqa@kcpass.or.kr, 02-2271-9050)

- 보건복지부는 인증신청을 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및 자체·서면·현장 심사를 거쳐 11월 중에 인증받을 기관을 확정할 예정
-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은 인증결과가 확정되어 통보된 날부터 3년간 유효하며, 인증을 받은 기관에는 품질인증 현판이 수여되고, 기관홍보물 및 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마크를 활용할 수 있음

※ 보도자료 참조(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6      증양정부 복지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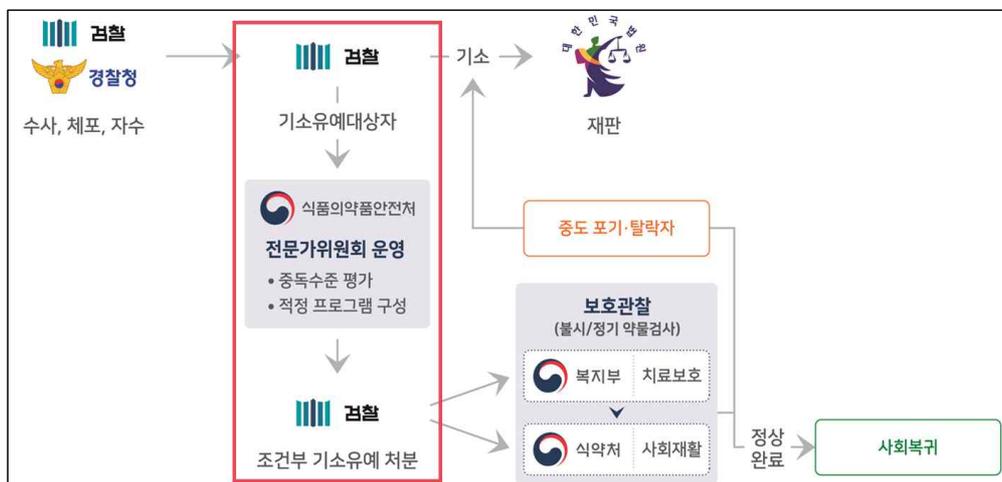
### 정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시범운영 실시

<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치료·재활 연속성 강화 >

< 맞춤형 치료·재활프로그램 제공, 온전한 사회 복귀와 확실한 재범 방지 목표 >

- \*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치료·재활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이하 ‘연계모델’이라 함)을 오늘부터 시범적으로 운영
- \* ‘연계모델’은 검거된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의 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중독전문가 등이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둔 제도
  - 이 제도는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기본으로, 중독전문가·정신과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과 재활 가능성을 판단한 뒤, 개인별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보호관찰소의 약물 모니터링까지 결합함으로써, 중독자 개개인의 온전한 사회복귀와 확실한 재범 방지 목표(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 및 재범 예방 교육과 함께 보호관찰관의 약물 모니터링, 상담 등을 통해 6개월간 선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제도)
  -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법무부·대검찰청·보건복지부·식약처가 함께 실시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한 뒤, 향후 전국으로 확대·추진해 나갈 계획
- \* 개략적인 절차
  - 우선 검찰이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참여 대상자를 선별해 식약처에 통보하면, 식약처에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에 따른 적정 재활 프로그램, 치료 연계 필요성 등을 제안하고 검찰이 이를 참고해 대상자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부과(중독분야 전문가, 정신과 의사, 중독재활센터장 등 5명 내외)
  - 대상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보건복지부 치료보호기관과 식약처의 중독재활센터에서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시에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약물감시 모니터링을 통해 선도조건부의 이수 여부를 점검받음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 개요]



**붙임**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시범사업 단계별 세부내용**

절차			세부 절차
단계	주관	작성자	
1	검찰	담당 검사실	선도조건부 기소유에 대상자에 대해 전문가위원회 의견, 제출 요청 공문 발송(수신:식약처)
2	식약처	전문가위원회	전문가위원회 개최 전 사전평가 - 위원회 구성원 중 중독분야 전문상담사의 기소유에 대상자 개별 면담을 통한 사전 평가 전문가위원회 개최(장소 : 중독재활센터 중앙) - 정신과 전문의, 중독전문가, 중독재활센터장, 검찰수사관, 중독분야 전문상담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결과 작성 전문가위원회 결과 알림 공문 발송(수신:담당 검사실)
3	검찰	담당 검사실	전문가위원회 결과를 고려한 조건부 기소유에 처분 선도위탁(수신 : 보호관찰소)
4	법무부	보호관찰소	재활프로그램 의뢰 요청(수신:중독재활센터) (치료연계 필요자) 치료보호 의뢰 요청(수신:치료보호기관)
	식약처	마퇴본부 중독재활센터	중독재활센터 대상자 등록 - 치료연계 필요자는 병원 진료 안내 - 치료보호기관 치료 후 재활 연계관리
	복지부	치료보호기관	(치료연계 필요자) 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입원통원 치료 실시
	식약처	마퇴본부 중독재활센터	1. 재활프로그램 실시(치료연계 필요자도 치료 이후 재활 진행) 2. 사후 상담 실시
	법무부	보호관찰소	약물검사 및 보호관찰 수행
5	검찰	담당 검사실	선도위탁 결과 송부(수신 : 담당 검사실) 처분 종료

※ 보도자료 참조(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예방재활팀)

### 3. 통계로 보는 복지

#### 1 중앙 통계현안

#### 2021년 및 2022년 가구특성별 소비자물가 작성 결과



※ 자료 : 통계청 자료(경제동향통계심의관 물가동향과)